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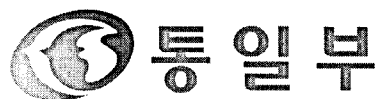
---

#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

---

2009. 6.





# 목 차

I.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1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II.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관련 .....	17
III. PSI 참여에 대한 북한 판문점대표부 성명 관련 ...	29
IV. 북한 「우리민족끼리」 주장의 허상 .....	39



---

##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

---



## I.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강경조치

### □ 북한 핵실험 → 미사일 발사 → 어디까지?

○ 북한은 5.25 2차 핵실험을 강행

#### 《 보도 내용 》

-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차 핵실험 성과적 진행
-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핵실험 진행, △핵무기 위력 강화, △핵기술 발전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
- 핵실험 성공은 △혁명적 대고조, △150일 전투를 고무
- 핵실험은 △자주권·사회주의 수호, △한반도 평화·안전 보장에 이바지

※ 우리 기상청(관측소)은 5.25 09:54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 감지 사실 발표

○ 5.25 이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6.1 현재까지 6발 발사)

○ 5.27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발표 : 정전협정 부인

-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할 것임.
-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
- 당면하여 서해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수역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음.

⇒ 북한은 지난 4.29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위협조치들을 예고

- △ 제2차 핵실험, △ ICBM 발사시험, △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등

## □ 북핵실험 : 충격과 실망, 그리고 문제점

### ①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 위협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
- 5천년 역사와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정

### ②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면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 동북아에서의 핵무장론 등 소모적 논쟁 유발
- 북한의 핵개발은 NPT 및 전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

### ③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금지를 규정한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25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

### ④ 한반도의 생태환경 파괴 및 북한 주민의 인명과 안전은 도외시

- 환경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생태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
- 아울러 북한의 기술 수준이 의심스러운 만큼 폭발력 예측 실패, 지질특성 파악 실수 등으로 추가 핵실험시 방사능 누출 가능성 상존
- \* 미국은 '70년대까지는 몇 차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 \* 소련은 지하 핵실험 중 약 100회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 '87.8월 지하핵실험 당시에는 방사성 낙진이 유럽전역에서 검출
- 특히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도 함북 일대에서 주민 소개 등 어떤 사전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

※ 핵실험 인근 청진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핵실험 진동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부들은 그대로 건물에 매달려 일을 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까 우려(핵실험 당일 체북 재중동포 사업가)



### ⑤ 북한 주민의 경제난 심화

- 북한은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을 스스로 닫고, 이로 인해 경제난은 더욱 가중
-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

## □ 정전협정 무효화 :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

### ① PSI는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 활동과 무관

-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국제협력체제
- 현재까지 94개국이 참여,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

### ②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은 정전협정 준수

- 북한은 '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대표부로 교체한 이래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해왔음.
- 지속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
- 한반도 평화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대화, 협력을 통해 구축됨을 인식할 필요

⇒ 우리 정부와 유엔사는 정전협정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NLL도 서해 해상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임.

## □ 북한의 강경조치는 지난해부터 지속

- 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3월말부터 대남 강경조치를 취했음.
  - 3.27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자 철수
  - 3.29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
  - 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
  - 11.12 적십자 중앙위 성명을 통해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
  - 12.1부터는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통제, △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남북열차 운행 중단, △개성·금강산 상주 체류인원 절반 감축
  - '09.1.17에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간 '전면대결태세 진입' 발표
    - 1.30 조평통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 무효화', '서해해상불가침 경계선 합의폐기' 선언
  - '09.3.5 한미합동 연습기간 동안 북한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항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
  - '09.3.9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군 통신선 차단 및 육로통행 차단
    - '09.3.9, 3.13~15, 3.20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 '09.3.30 북한은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
  - '09.4.5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 '09.4.14, 외무성 성명,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천명
    - △ 6자회담 참가 및 합의사항 이행 거부, △ 핵억제력 강화, 핵시설 원상복구 및 정상가동, △ 폐연료봉 재처리
  - ※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감시요원 철수요구(4.14)에 따라 IAEA 검증팀(4.16) 및 미관계자(4.17~18) 출국

- '09.4.18, 군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등을 통한 그 어떤 압력도 北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
  - \* “PSI에 참가한다면 北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3.30 조평통 대변인 담화)
- '09.4.25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언급(외무성 대변인)
  -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 발표
- '09.4.29 외무성 대변인 성명, 추가조치 이행 시사
  - △ 제2차 핵실험, △ ICBM 발사시험, △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등
- '09.5.15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
  -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
  -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
- '09.5.25 北, 2차 핵실험 강행
- '09.5.27 우리의 PSI 참여에 대하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발표
  -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 △정전협정 파기,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의 담보 불가 등
- 5.29,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움직임 비난
  - 안보리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 파기이며,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에 대한 추가적 조치 감행 가능성 시사
- ② 북한은 또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08.4.1부터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약 3천회가 넘는 원색적인 비난을 지속하고 있음.
    - 상대방에 대한 증상·비방과 지명공격은 남북간 중요한 합의 위반
    - 상대방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자 기본 예의

---

## Ⅱ. 우리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추구

---

###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상생공영정책 정립

- 정부 출범('08.2) 이후, 새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통일정책 방향을 「상생과 공영」으로 결정
  - 남북이 윈-윈(Win-Win)하자는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
  - 이는 남북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구상
-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비핵·개방·3000구상임.
  - 「비핵·개방·3000」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내놓은 새로운 구상임.
  - 이것은 미래 지향적·평화적인 것으로, 무엇보다도 역사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임.
  - 이는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님.
  - 남북이 「동반퇴보」가 아니라 「동반 전진」을 하자는 것임.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하자는 것임.

### □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진
  - 대통령께서 직접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5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08.4.17, '08.6.6, '08.7.11, '08.8.15, '08.9.22)
    -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 제의('08.7.11)

- 2009년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남북대화 의지 표명
- 통일부장관도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

**《 2009.6.1, 제16차 대통령 라디오 연설 》**

- 지난 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에 큰 실망과 충격을 주었음.
  - 전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고, 더욱이 우리가 상중에 있음에도, 늘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음.
  - 그리고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음.
-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고 차분했음.
  - 충격적인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음.
  -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음.
  -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위협에는 당당히 맞설 것임.
-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 국제사회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생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
- 북한도 아직 늦지 않았음
  -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
- 북한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굳이 외면하고, 파국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함.
- 정부는 앞으로도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음.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음.

-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
  - 정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작년 5-6월 북한에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제의
  -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WHO와 UNICEF 등)를 통한 북한 농촌개발·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인도적 사업을 지원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납북자 피해보상 지원 등 노력
  
-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
  - '08년 남북왕래인원은 186,775명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
  - '08년 남북교역은 18.2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
  
- 개성공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
  - 4.21(火) 개성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현안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진행
    -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사용료, 북측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특혜 조치 재검토 일방 통보
    - 우리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부당성 지적 및 즉각적인 신병인도 요구, 남북간 긴장조성 및 국가원수 비방 행위 중단, 출입·체류 제한 조치 철회 등을 요구
  - 5.15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
  
- ⇒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간 상생공영의 발전모델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
  - 현재 △가동기업 수는 108개, △북한근로자 40,022명('09.6.10 기준), △생산액은 6억달러('09.5말 기준)

-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유연한 정책을 추진
  -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
    - 이에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비난했음.
  - 따라서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유연하고 북한은 강경했던 사실이 분명
    -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음.
    - 이러한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

**《 2009.6.6, 제54회 현충일 추념사 》**

-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동족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북한의 위협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도전임.
- 정부는 우리 국민과 영토를 수호할 것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
  -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과 6자회담에 나와야 함.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
-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음.
  - 북한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조건없이 돌려보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함.

## < 붙임 >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 ①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유연합니다.

-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실시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정책을 써 본 일이 없습니다.  
-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했고, 협력을 제의했으며,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화해협력·공존공영의 유연한 대북 포용정책입니다.
-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관계를 위해 인내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 《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 관련 주요 어록 》

-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1.2, 09년 신년국정연설)
- ‘한국이야말로 북한을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도울 것.’(1.30, SBS 원탁토론)
-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 함.’(3.2, 제90주년 삼일절 기념식)
- ‘이제 남북은 대결이 아닌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함.’(3.13, 해사 제63기 임관식 축사)
- ‘현 정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 북한을 대하는 것일 뿐, 과거보다 경직된 정책을 펴려는 것이 아님.’(3.30, 英 파이낸셜타임즈(FT) 인터뷰)
-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4.3, 韓·中 정상회담)
- ‘우리는 필요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 있음.’(4.3, 외신 공동 인터뷰)
-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상화되어야 함.’(4.6, 여야 3당 대표 청와대 초청 조찬회동)
-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것임.’(6.1, 제16차 대통령 라디오연설)



② 정부는 정책을 승계하고 정세변화에 따라 변화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 모든 정책은 계속성과 변화의 조화를 속성으로 합니다.
- 지난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고, 남북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루지 못했으며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남남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생과 공영정책은 지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되, 국민의 비판을 받은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합의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높게, 실질적,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③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합니다.

- 일부에서는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그간의 남북간 모든 합의들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협의를 통해 상호 존중과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즉, 양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추진하기 위해 먼저 남북 당국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08년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화를 북한에 제의했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화를 중단함은 물론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 일방적으로 과거 합의를 폐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④ 「비핵·개방·3000」은 원칙있는 대북 포용정책입니다.

- 일부에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이 대북 적대시 정책, 先핵 폐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입니다.
    -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 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 등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는 구상입니다.
  - 특히,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개념 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구상 자체가 하나의 큰 열개입니다.
    - 세부 내용은 향후 남북대화 등을 통해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통일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同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남북사이의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입니다.
- \*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 성장을 뜻하며,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 남북간 통일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 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정부는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정부는 개성공단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 소각장 준공('08.6, 12톤), △ 탁아소 설계 및 건축계약('08.12) △ 아파트형 공장 준공('08.12)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출퇴근 버스 100대를 추가 투입하여 근로자의 공급여력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러나 북한은 5.15 북한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차계약, 토지 사용료, 북측 근로자 임금 등 기존 범규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근로자도 장기간 억류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억류된 우리 근로자부터 석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 합의와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끝/



---

##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관련**

---



## I.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

-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9.5.25 제2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
  - 우리 기상청은 5.25 09:54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 감지 사실 발표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5.25 11:59 2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
- 북한은 2006년 10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추가 핵실험에서 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폭발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조선중앙통신」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었으며,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

### < 1차·2차 북한 핵실험 비교 >

구 분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일 시	2006.10.9 10:35	2009.5.25 09:54
장 소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진파규모	리히터 규모 3.6	리히터 규모 4.4

\* 지진파규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평가 자료(2009.5.25)

---

## II.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

---

-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민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군사·안보적 문제 야기
    -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도발 행위
  -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핵확산은 물론 세계적 핵확산 도미노 현상 초래
    - 아울러 핵무기와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게 된다면 통제 불가능의 상황 발생
  
- 남북간 및 6자회담 합의 위반이자 UN안보리 결의 위반
  -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위반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를 합의(「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1조, '92.1.20)
    - 6자회담 제4차 회의 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9.19 공동성명」, '05.9.19)
  - UN안보리 결의 제1718호('06.10.15) 위반
    - 제1차 북핵실험 후 UN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북한에게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



## □ 북한의 경제난 심화

- 북한의 핵개발로 UN안보리 및 미국·일본·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외면한 채 핵 개발에 집착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
  - 북한의 대외무역 중 對中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심화('08년 77%)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고립을 반증
- ※ 북중무역의 비중은 '03년 32.7%→ '04년 48.5%→ '05년 52.6%→ '06년 56.7%→ '07년 67.1%로 계속 증가 추세

## □ 북한 주민들의 빈궁한 생활 외면

- 북한 핵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북한주민들임.
  - UN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감소로 식량 및 보건의료 사정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 질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 여타 식량 공급·의료·복지 등 북한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상실

## □ 한반도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

- 한반도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핵실험이 실시되면 한반도 전체의 생태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
  - 핵실험에 따른 환경오염 시 회복에 수백년 이상 소요
  - 특히, 핵실험이 실시된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 지역의 주민, 생물, 토지, 지하수 등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위험 소지

- 현재 우리측 대기권에는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 \* 미국은 '70년대까지는 핵실험시 몇 차례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음.
  - \* 구 소련은 지하 핵실험 중 약 100회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으로 방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7.8월 지하핵실험 당시에는 방사성 낙진이 유럽전역에서 검출된 바 있음.

### Ⅲ.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

#### □ 정부 조치

-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임.”(이명박 대통령, '08.8.15 광복절 경축사)
  -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임. 조건없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이명박 대통령, '09.3.1, 3.1절 기념사)
- 정부는 제2차 북핵 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정부성명을 발표

#### 《 주요 내용 》

-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
-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 체제에 복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규범을 이행할 것을 촉구

○ 각국 정상간 긴급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 협조 확보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5.26), 일본 아소 다로 총리(5.25),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5.27), 호주 러드 총리(5.26) 등과 전화를 통해 북핵 문제 공조 협의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북핵 상황실을 설치, 비상 상황체제 가동

□ 국제사회의 조치

○ UN안보리는 '09.5.26 긴급회의를 소집, 북핵 실험 규탄 및 대북 제재 조치 논의 착수

- UN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미·영·중·프·러·일 등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협의

-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일본간 안보리 제재결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현재 대북제재의 수위를 놓고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의견 조율, 조만간 채택

○ 미·일·중·러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개발시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UN안보리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5.25)

- 일본 아소 총리는 “북핵 실험은 일본과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5.25)

-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북한 핵실험 진행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5.25)

- 러시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정당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5.26)

- 한·미·일 국방장관은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도발에 보상없다는 점을 강조(5.30,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
  - 아울러 북한의 NPT 체제 및 6자회담에 조기 복귀토록 협조하기로 합의
- 제9차 ASEM 외교장관회의(5.26, 하노이)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별도성명 채택
  - “6자회담 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정을 명백히 위반”, “추가적 핵실험을 하지 말 것, 유엔안보리 결정을 전면 이행할 것”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6.1~2, 제주)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 언론성명을 채택
  - “북한의 지하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공동언론성명)
  -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계속”(공동성명)

---

#### **IV.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불용**

---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
-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 국제사회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생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

○ 북한도 아직 늦지 않았음.

-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

○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고 상생과 공영의 길로 나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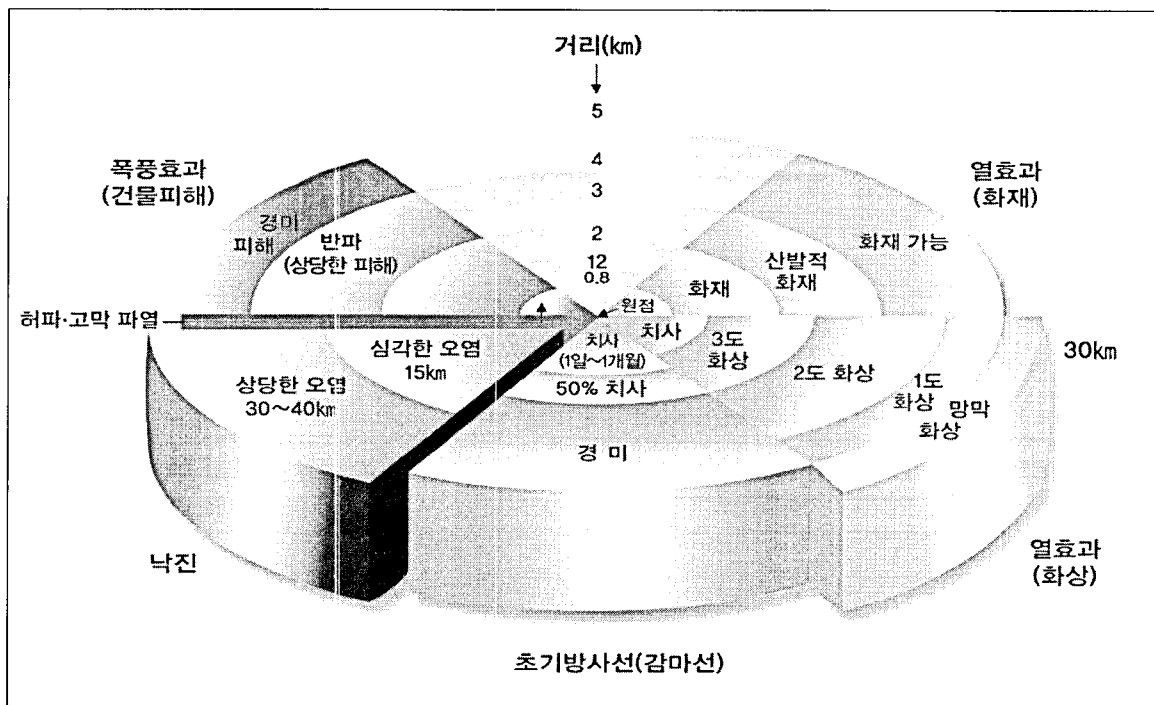
○ 정부는 앞으로도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음.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음.

/끝/

## < 붙임 1 > 핵무기의 파괴력

- 핵무기가 터지면 폭풍파, 열복사선, 초기방사선이 방출되어 대량살상을 가져오며, 잔류방사선(낙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전자기 파동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됨.
  - 폭풍파(Blast Wave)는 음속의 몇 배나 되는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며, 열복사선(Thermal Radiation)은 폭발시 발생한 열선으로, 화재와 함께 피부 및 망막에 심각한 화상 유발
  - 초기 방사선(Radiation)은 핵폭발시 즉시 방출되는 감마선 및 중성자로, 폭발지역 근처에서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며, 낙진에서 나오는 잔류방사선은 기상 상태에 따라 넓은 지역을 오염시킴.
  - 전자기 파동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와 전자장비를 손상시켜 각종 군사장비, 미사일, 항공기 등을 무용지물로 만듦.
- 만약 20kt의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반경 1.2km 이내 동식물은 모두 죽게 되고, 건물은 완전히 파괴됨. 핵폭발 지역에서 30km 떨어져 있어도 폭발 장면을 보았다면 망막 화상을 입으며, 낙진은 반경 40km까지 떨어져 상당한 정도로 오염을 야기

<20kt 핵폭발의 피해 범위>



\* 출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2007, 국방부)

## < 붙임 2 > 북한의 핵개발 일지

- 1992. 1. 20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1993. 3. 12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 1994. 6. 13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 1994. 10. 21 북미간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체결
- 1995. 12. 15 북·KEDO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 1997. 7. 28 KEDO 합남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수
- 2002. 10. 3 미국,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문제 제기
- 2003. 1. 10 NPT 탈퇴
- 2003. 8. 27 제1차 6자회담 개최(베이징)
- 2005. 2. 10 핵무기 보유 선언
- 2005. 9. 19 6자회담, 「9.19공동성명」 발표
- 2006. 10. 9 제 1차 핵실험 강행
- 2007. 2. 13 6자회담, 북핵 불능화를 위한 「2.13 합의」
- 2008. 6. 27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 2008. 10. 12 미국,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2009. 5. 25 제2차 핵실험 강행

\* 2006.10.9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일 뿐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포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9.19공동성명」에 합의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음.

남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활발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2차 핵실험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음.





---

**PSI 참여에 대한  
북한 판문점대표부 성명 관련**

---



---

## I. 상 황

---

- 정부는 5.26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음.
  -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함.
  
- 북한은 5.27 우리의 PSI 참여에 대하여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음.
  - 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 북한군은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 당면하여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 군함 및 일반선박들의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같은 날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위협
  - 북한선박에 대한 정선·승선·검색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다.
  - 전시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

## Ⅱ. 북한의 주장 평가

---

① PSI 전면참여 관련, 선전포고로 간주,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 행위를 포함하여 사소한 적대행위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낙인, 즉시적·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임.

○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국제협력체제

- PSI는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 활동이 아님.

○ 현재까지 94개국이 참여,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억지주장

○ 우리가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남북해운합의서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각에서 말하는 남북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음.

-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면 한반도 수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항해는 남북한간 상호 승인과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 공해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flag state)의 동의 없이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함.

② 북한 군대는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법적 전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고,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임.

○ 북한은 '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대표부로 교체한 이래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상투적으로 해왔음.

- 지속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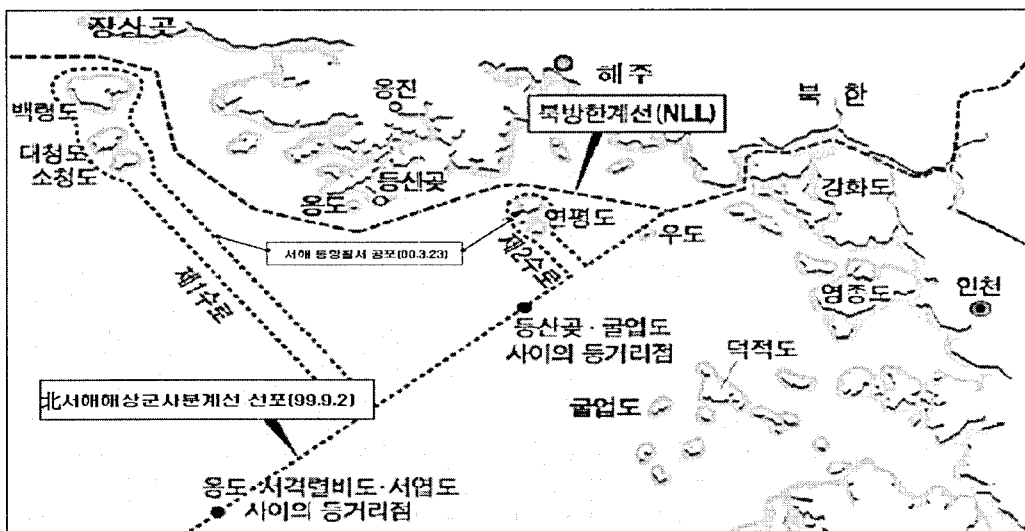
○ 우리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이를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

< 북한의 주장 일지 >

구분	일시	기 관	주요내용
1	'94.5.23	외교부 대변인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94.5.24	판문점대표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내왔다.
3	'96.4.4	판문점대표부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4	'03.2.18	판문점대표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5	'03.7.1	판문점대표부	미국측이 조선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작부터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될 것이다.
6	'06.8.22	판문점대표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
7	'09.5.27	판문점대표부	미국이 괴뢰들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③ 당면하여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군 및 남한 해군함선,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

-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지위는 정전협정(13항 ㄴ 목)에서 분명히 우리의 관할로 규정했으며, NLL은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음.
- 북한은 1차 연평해전('99.6.15) 이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99.9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수역에서의 항해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옴.
- 정부는 서해 5도와 NLL을 확고히 지킬 것임.



※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여 북한측도 우리측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 Ⅲ. 결 론

- 상기 북한의 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예상했던 사항으로서 기존에 상투적으로 해 온 북한측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임.
- 과거 북한의 유사한 위협의 경우에도 우리 경제(주가,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단기적·제한적이었음.

	주가		환율	
	당일변화폭	반등소요기간	당일변화폭	반등소요기간
'94.7월 김일성사망	+0.3%	영향없음	-0.1%	영향없음
'98.8월 대포동	+1.8%	영향없음	+1.2%	+2일
'03.3월 미사일	-0.3%	+4일	+1.6%	+1일
'05.2월 핵보유발표	-0.2%	+1일	+0.7%	+1일
'06.10월 핵실험	-2.4%	+1일	+1.6%	+1일
'09.4월 로켓 발사	+1.1%	영향없음	-2.3%	영향없음

- 정부로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현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음.
  - 개성공단 등의 경우에도 현재 긴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남북간 실무 회담을 위한 회담 일정협약과 기업경영실태자료 전달 등 남북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 국민들도 과거 북측의 반복적인 위협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성숙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고 있어, 이번 북한측의 주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임.

## 정전협정과 관련한 북한측 발표내용

### ① '94.5.23 외교부 대변인 담화

- (환태평양훈련 림팩이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행동에 매어달리지 말고 우리의 평화적 발기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 미국 자체의 이익의 견지로 보나 지역적 평화담보의 견지에서 보나 이성적인 처사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조선정전협정의 의무를 더는 이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② '94.5.24 판문점대표부 개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내왔으며 중장 리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영철을 책임연락 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미군측에 통지했습니다.

### ③ '96.4.4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남조선 군사당국은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땅크와 각종 구경의 포, 중무기들을 대량 반입하고...위임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당면하여 다음과 같이 취하기로..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자기의 임무를 포기한다..

### ④ '03.2.18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비난)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를 가해 온다면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선언한다..



5 '03.7.1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미국의 전력증강계획 발표 비난) 미국측이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나 해상 및 공중봉쇄를 감행하는 경우 그리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측은 미국측이 조선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작부터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 조치를 단호히 취하게 될 것이다.

6 '06.8.22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비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위임에 의하여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

7 '09.5.27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PSI 전면가입 비난)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대조선압살책동에 열이 뜨 나머지 국제법은 물론 정전협정자체를 부정하다못해 협정조인당사자로서의 책임마저 쫓버리면서 괴뢰들을 끝끝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끝/



---

## 북한 「우리민족끼리」 주장의 허상

---



---

## I. 북한 「우리민족끼리」 주장 상황

---

- '우리민족끼리' 용어는 '00년 6.15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
  - 이는 열린 민족주의를 전제로 통일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이 합의
    -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6.15 남북공동선언 제 1항)
- 그러나 북한이 이 조항의 해석을 폐쇄적이고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방향으로 해석

---

## II. 북한 「우리민족끼리」 주장의 허상

---

### ① 우리 근로자 억류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도 경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를 억류, 협력에 장애를 조성
-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 72일째(6.9 기준)
  - 북한은 지난 3.30 체제비난과 북한측 여성종업원 변질·타락 및 탈북 책동을 이유로 우리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억류
  - 현재까지 기본권인 접견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조사를 지속
- 북한의 우리 근로자 억류는 명백한 남북간 합의 위반
  -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의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에 정면 위배
    - \* 피조사자의 접견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
  - 억류된 우리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건강한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
  - 이에 반해 美 여기자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접견 및 미국내 가족들과도 통화 허용, 6.4에는 재판에 회부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진행

**< 개성 우리 근로자와 美 여기자 억류 상황 비교 >**

구 분	개성 우리 근로자	美 여기자
억류기간	3.30 ~ 현재(6.9) 72일째 억류	· 3.17 ~ 현재(6.9) 85일째 억류
신변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으로부터 공식통보 없음.</li> <li>- 유씨 신변에 이상없다는 것을 간접 확인</li> <li>○ 평양이송설은 아직 미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8경 평양 압송(추정)</li> <li>· 美,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통해 접견</li> <li>· 여기자들, 미국내 가족과 통화</li> </ul>
재판여부 및 진행상황	· 재판여부 및 진행사항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4 재판회부 결정</li> <li>· 6.4 중앙재판소 재판 및 6.8 北, 재판결과 보도</li> </ul>

**② 대화와 접촉 중단**

- 겉으로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대화와 접촉을 중단
  - 북한은 협력의 상대방인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음.
    - 작년 3월말부터 남북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08.3.29)
    - '08.4.1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약 3,000회가 넘도록 지속
    -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
- \* ① “상설대화기구설치” 제의('08.4.17), ② “6.15 및 10.4 등의 이행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용의”(‘08.7.11), ③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09.3.2), ④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임.”(‘09.6.1)

### ③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작년 7.11 금강산 관광지에서 군인이 관광을 간 민간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는 적대행위 실시
  -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는 부녀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북한의 관광객에 대한 총격은 그동안 발전되어온 남북간 화해와 협력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때 현대-아태간 맺은 신변안전 보장 합의와 무사귀환 약속을 모두 위반
  - 남북간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합의서」도 정면 위배
-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사과 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이 진정으로 민족 구성원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억울한 죽음 앞에 진상규명과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

### ④ 군사적 강경조치와 위협을 지속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남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음.
  - 제2차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면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
  -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로 우리 민족 전체를 공멸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음.
- '09.3.9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 보도를 통해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된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
- '09.3.5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
- '09.4.16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이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라”고 엄중 경고
- '09.5.27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지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

## ⑤ 이산가족 상봉 중단

-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도 가족간의 상봉도 거부
  - 이산가족 상봉을 '07.10월 이후 1년 7개월째 중단하고 있음.
  - 1년이면 3~4천명의 고령 이산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금강산에 상설면회소를 준공('08.7)한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상봉의 굳게 문을 닫아걸고 있음.
- 우리측의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대북 적대감 고취, 대결책동 합리화”라고 비난('08.8 北 적십자 대변인 담화, '09.5 北 적십자 중앙위 대변인 담화)하고 있음.
  -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비인도적 행위



## ⑥ 개성공단사업을 위협

-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을 6.15와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상징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개성공단사업을 훼손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지속해왔음.
  - '08.12.1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제한·통제 및 개성공단내 체류인원 절반 감축
  - '09.3.9, 3.13~15, 3.20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 '09.5.15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
    - \*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 선언,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하다는 입장
- 또한 개성공단의 안정과 입주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 등 /끝/

